

부 산 가 정 법 원

제 1 가 사 부

결 정

사 건 2019브20019 개명

신청인 겸 사건본인, 항고인

갑

제 1 심 결 정 부산가정법원 2019. 2. 28.자 2018호명100613 결정

주 문

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.

신청취지 및 항고취지

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. 등록기준지를 ○○○으로 하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(이하 '신청인'이라 한다) '□□□'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'□□'를 '△△'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.

이 유

1. 항고이유의 요지

신청인은, '□□'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 '△△'으로 개명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명허가를 구하고 있다.

2. 판단

살피건대, 개명을 허가할 때에는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,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,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,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(대법원 2005. 11. 16. 자 2005스26 결정, 대법원 2009. 10. 16. 자 2009스90 결정 등 참조).

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, 신청인은 2008. 3. 25.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이름 "◇◇"을 "☆☆"으로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2008. 3. 28. 신고를 마친 사실, 신청인은 2013. 9. 12.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이름 "☆☆"을 "□□"로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2013. 9. 24. 신고를 마친 사실, 신청인은 2018. 12. 16. 다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개명허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, 신청인은 2017. 1. 18. ▽▽죄로 벌금 등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, 이러한 신청인의 개명전력과 범행전과에 더하여 신청인의 나이, 개명신청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,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그렇다면 이 사건 개명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,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9. 5. 17.

재판장	판사	박원근
-----	----	-----

	판사	이민령
--	----	-----

	판사	나재영
--	----	-----